박근혜정부 첫 국감… 여야 '불꽃대결' 예고

대화록·국정원 개혁·기초연금 등 전방위 충돌할듯

피감기관 630곳 역대 최다… '겉핥기식' 감사 우려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다.

지난 1988년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부활돼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선 목전에 열려 19대 국회 첫 국감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부실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국감은 지난 8개월간 드러난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으로 따지는 무대라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사태, 세제개편안, 4대강 사업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일제히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민생국감'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예년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내에 국감 상황실을 나란히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 과제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가 역점을 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의제로는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이 꼽힌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돼 있어 파괴력이 큰 사안들이다. 여야간 이견이 큰 게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은 국감이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를 목표로 삼았다.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두 달 넘게 국민을 상대로 장외 전선을 지켜왔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다 대여(對與)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은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진상과 박근혜정부 8개월간 국정난맥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또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과거 회귀적 국정운영의 문제점도 지적, 확고한 견제세력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는 것은 '민생살리기'다.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된 '24시 비상국회 운영체제' 국회 합숙투쟁을 이어온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정부가 파기한 대선공약을 살려내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및 원전비리 등을 집중 부각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 및 전월세 폭등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 전병헌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합실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동양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제기

민주, 금감원장 사퇴 촉구…향후 파장 주목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동양그룹 부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융당국 비판에 나서고, 야당은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정감사에서 반영될 것을 보여 금융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 투자자 약 4만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동양그룹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을 통해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대주주 등 책임자들이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사전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도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동양 사태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금감원이 꼭 그 모양"이라면서 "(금감원은) 특별감사를 한다는 등 때늦은 호들갑으로 면피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30재보선 총 6명 출사표…3대 1 경쟁

전과 기록 4명…군면제는 1명

재산, 박명재 21억 가장 많아

경기 화성갑과 포항남·울릉에서 치러지는 10·30 재·보선에 총 6명의 여야 후보들이 11일 등록을 마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2개 선거구에서 모두 6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갑에는 서청원(70·새누리당)·오일용(45·민주당)·홍성규(39·통합진보당), 포항 남·울릉에는 박명재(66·새누리당)·허대만(44·민주당)·박신용(53·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4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명이 군 면제를 받았다.

화성갑의 서청원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2008년 '친박연대 고액헌금 사건'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홍성규 후보는 1996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허리 디스크 수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포항 남·울릉의 허대만 후보는 1995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박신용 후보는 과거 노조활동을 하면서 집시법 위반(2004년), 업무방해(2008년)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은 박명재 후보가 2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오일용(7억원), 서청원(3억6000만원), 허대만(1억2000만원), 홍성규(1억원), 박신용(7000만원) 후보 등의 순이었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없었다.

후보자들은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연합뉴스

안철수, 12월 '창당준비위' 띄운다

이번주 호남권 2차 실행위원 발표 등 내달까지 지역별 인선 완료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가시화〈**광주일보 8월29일자 1면**〉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이 오는 12월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번 주중 수도권 및 부산 등 영남권 실행위원과 호남권 2차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등 다음달까지 전국 조직인 지역별 기획·실행위원회 인선을 마치는 등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창당에 앞서 지역별 전국 조직이 갖춰질 오는 12월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당에 참여할 전·현직 중량급 인사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설(設)만 무성했던 '안철수 신당'의 구체적 로드맵이 그려진 셈이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중 호남권 실행위원 2차 명단 발표와 더불어 수도권 및 부산 등 영남권 실행위원을 발표하는 등 지역별로 안 의원과 함께 새정치 기반을 다져나갈 공식적인 조직을 꾸릴 계획"이라며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목표로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2월께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호남권 2차 실행위원에 포함된 인사들은 대부분 지역 내 직능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의원 측은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을 확장·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등 내년 12월 창당준비위를 꾸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울러 안 의원 측은 신당에 합류할 기성 정치인들을 내년 2~3월쯤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중에는 민주당 출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의원에게 내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신당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여야 전직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주의 초석은 시민들의 힘"

윤장현 前 한국YMCA이사장

윤장현 전 한국 YMCA이사장은 지난 11일 '직접 민주주의 전도사'로 불리는 부르노 카우프만과 만나 '주민주권과 지방행정,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은 광주·전남 직접민주주의연구원이 주최한 '지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와 유럽의 사례'라는 주제의 특강에 앞서 열렸다.

이날 대담에서 윤 전 이사장은 "민주주의 초석은 시민들의 힘"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지방행정이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발현의 한 형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결정이나 결단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우프만 대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중의 힘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르노 카우프만은 직접 민주주의 싱크탱크이자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IRI 유럽(Initiative & Referendum Institute Europe·유럽주민발안과 국민투표기구)'의 대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감정가/시세 – 23억원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매매가 – 22억원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010–4667–9300

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